

이 자료는 12월8일(목) 11:00시 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말씀은 아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례브리핑 모두 말씀

2005. 12. 8(목)

1. 최근 경제동향 / 1

① 최근 경기흐름 / 1

② 국민소득(GNI) 0%대 증가의 의미 / 4

③ 최근 경제심리 동향 / 8

2. 8.31 부동산정책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 / 11

3.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 회의결과 / 14

4.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계획 / 17

5. 지역특구제도 운영 현황 및 신규지정 지역 / 19

재 정 경 제 부

1

최근 경제동향

① 최근 경기흐름

□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을 보면, 경기회복기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수출은 11월에 260억불대(260.7억불, 13% 증가)를 달성하여 3개월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

	05.7월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수출(억불, 통관 기준)	232.4	233.5	245.3	255.0	260.7	2,592.2
(전년동기, %)	(10.6)	(17.9)	(17.8)	(12.5)	(13.0)	(12.4)

- 내수는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그간의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는 유통업체 매출, 자동차내수판매 등 최근의 속보지표에서도 나타남

* 민간소비(국민계정, %) : (04)△0.5, (05.1/4)1.4→ (2/4)2.8→ (3/4)4.0

* 소비재 판매(%) : (05.1/4)1.2→ (2/4)3.2→ (3/4)3.8→ (10)3.4

* 백화점 매출(%) : (05.8)7.0→ (9)8.7→ (10)5.9→ (11)6수준

할인점 매출(%) : 2.8 3.0 7.4 5수준

* 신용카드사용액(%) : (05.8)17.3→ (9)17.8→ (10)19.1→ (11)18.3

* 국산자동차 내수(만대) : (05.8)9.0→ (9)8.2→ (10)9.7→ (11)11.0

(증감율, %) : 7.6 △9.0 1.9 16.5

<자료 : 산자부, 여신전문금융협회, 자동차공업협회, 05.11월은 재경부 모니터링>

- 생산 활동도,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활동의 회복세가 유지

* 산업생산(%) : (05.2/4)4.0→(3/4)6.9, (8)6.4→ (9)7.3→ (10)8.0

* 서비스업 활동(%) : (2/4)2.4→ (3/4)5.3, (8)5.9→ (9)5.5→ (10)4.7

- 물가는 소비자물가 2%대, 근원물가 1%대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전년동월비, %)

	04.11월	05.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3.3	2.5	2.0	2.7	2.5	2.4
근원물가	3.1	2.1	1.9	1.9	1.8	1.9

- 이러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경우 4/4분기 우리 경제는 4% 후반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 속도를 나타낼 전망

- 다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주도할 투자가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며,

* 설비투자(국민계정, %) : (04)3.8, (05.1/4)3.1→ (2/4)2.9→ (3/4)4.2

* 건설투자(국민계정, %) : (04)1.1, (05.1/4)△2.9→ (2/4)1.7→ (3/4)0.4

- 경제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세가 아직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국내 경기흐름과 대외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공고해 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부문별로 세부적인 동향에 대하여는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12월 그린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최근 한달간의 주요 경제동향을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

② 국민총소득(GNI) 0%대 증가의 의미

□ 금년 3/4분기중 국내총생산(GDP)은 4% 중반(4.5%) 성장하였으나, 국민총소득(GNI)는 0.1% 증가에 그쳤음

○ 이에 따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민총소득(GNI)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3/4분기 들어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액이 12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 교역조건 악화의 주된 요인은,

-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휴대전화 등 IT제품의 수출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은 크게 상승한 데 있음

* 금년 1~11월중 반도체가격(DDR SD램)은 전년동기 대비 약 30% 하락한 반면, 국제유가(Dubai유)는 약 46% 상승

□ 다만, 이러한 국민총소득(GNI)의 정체가 가계소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① 우선, 교역조건 악화의 주 요인인 고유가가 원화
절상과 동반해서 나타남으로써 그 효과가 상쇄되어

-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가게의 실질구매력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

- * 금년 1~11월중 국제유가(Dubai유)는 45.8% 상승하였으나 국내 휘발유가격은 4.7% 상승에 그침
- * 금년 1~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3.0%)보다 낮은 2.8%로 안정되어 있음

② 기업 부문에서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을
1차적으로 상당히 흡수함에 따라 가게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고 있음

- 기업은 우선 원가 절감을 통하여 부담을 흡수하고, 남는 부분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국내 판매가격 인상, 임금인상 억제 등을 통하여 가게 부문에 전가

- * 기업경영분석에 기초한 분석 결과, 96~04년간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손실 중 약 70%은 원가 절감, 나머지 약 30%는 국내 판매 가격 상승을 통하여 보전한 것으로 추정

- 특히, 현재 기업 부문은 재무상황과 수익성이 양호하여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

- * 제조업 현금 보유규모(조원) : (02말)47→ (03말)60→ (04말)66
- * 제조업 영업이익률(%) : (03상반)8.2→ (04상반)12.1→ (05상반)7.7
- * 특히, 반도체 등 IT수출가격 하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IT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다른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 (04년 기준) IT기업 11.5%, 제조업 7.6%
 - (05년 상반) IT기업 7.9% 제조업 7.7%

③ 마지막으로, 국민총소득(GNI)은 가계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계의 실제 소득은 고용과 임금 수준이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고용과 임금 여건은 최근 들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취업자증감(전년동기 대비, 만명) : (05.2/4)38.2→ (3/4)37.9→ (10)28.4
- * 실질 임금상승률(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준, %) :
(04년)2.4, (05.1/4)4.2→ (2/4)4.3→ (3/4)3.5
- * (참고)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은행 분석자료(05.12.9일, 2006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최근 민간소비는 국민총소득(GNI)보다 ‘취업자와 실질임금의 증가율 합계’(취업자증가율 + 실질임금 상승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최근의 국민총소득(GNI) 정체가 장기화된다면, 가계소득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나,

○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기관의 일반적인 견해는

-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은 유지하겠지만, 그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고,
- 반도체 등 IT제품 수출가격도 IT 경기회복에 힘입어 하락폭이 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

③ 최근 경제심리 동향

- 다음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표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심리지표는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그 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먼저 오늘 오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는 기준치인 100에는 미달하였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음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기대지수	90.3	99.4	102.2	101.3	99.2	95.4	95.2	94.8	96.7	97.5	98.5
소비자평가지수	66.5	83.2	89.6	90.2	85.5	79.7	78.9	78.3	81.2	83.4	84.9

- 소득계층과 연령층 별로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중상위 소득계층과 20대, 30대의 젊은 계층은 전월에 이어 기준치인 100을 상회한 반면, 나머지 계층은 기준치를 하회

- * 소득계층별 소비자기대지수 : 월소득 100만원미만 92.9, 100만원대 95.9, 200만원대 99.5, 300만원대 102.6, 400만원 이상 103.3
- * 연령층별 소비자기대지수 : 20대 105.0, 30대 100.7, 40대 98.6, 50대 96.4, 60대 이상 95.1

□ 다음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
실사지수도 완만하지만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

○ 대기업(600대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전경련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4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며,

-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9월 이후 소폭
이나마 개선되는 모습

< 한국은행 · 전경련의 기업경기실사지수 >

	05.6	7	8	9	10	11	12
한은 전망	84	82	78	85	87	87	86
실적	79	75	77	78	83	84	
전경련 전망	105.1	96.5	91.7	111.4	110.2	107.8	103.8
실적	93.4	91.7	91.0	99.2	98.0	101.8	

* 지수 = 「호조」 응답업체 구성비(%) - 「부진」 응답업체 구성비(%) + 100

* 조사대상 : (한은)중소 · 대기업 2,902개, (전경련)600대기업

○ 한편, 분기별로 조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경기실사지수도 내년 1/4분기에 기준치(1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경기실사지수(대한상의) : (05.2/4)111 (3/4)107 (4/4)100 (06.1/4)101

□ 앞으로도, 심리지표는 실물지표의 회복세를 반영하여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고유가 등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경제양극화 등으로 모든 부문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는 못하는 만큼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

- 8.31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라는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 정부와 여당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마련한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혁방안임
- 그러나, 8.31 정책이 발표된 지 100일이 되고 정기국회 폐회 직전인 오늘까지도 부동산 정책 관련 14개 법률안중 9개 법안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 공급대책 관련 입법은 국토계획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 *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이상 11.16일) 주택법, 토지보상법(이상 12.1일 본회의 의결)
 -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제 관련 법안들은 여·야간 입장 차이 등으로 신속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입법지연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시장에 8.31 정책 입법시기가 늦춰 지거나 당초 내용이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어
 - 8.31 정책 발표 이후 안정 기조를 유지해 오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임

- 특히,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8.31 대책 발표 이후 큰 폭 하락하였으나, 입법지연 및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10월 중순 이후 오름세로 반전*하였음

* 8.31 정책 발표후 10.10일까지 $\Delta 5.1\%$ 하락하였던 강남3구 재건축 집값이 10월 중순 이후 오름세로 반전하여 11.28일 현재 누적 하락율이 $\Delta 1.2\%$ 로 축소

- 지금은 시장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능력과 입법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지난 10.29 대책 입법과정에서 보듯이 8.31 정책과 같이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정책마저 입법지연 또는 내용완화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음

- 오늘 제1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8.3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은

-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어야만 하는 사항들임

- 최근 부동산 입법 처리를 위하여 여·야가 정책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어젯밤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부동산 세법이 원안 의결된 데 대하여 기대를 표명하며,

-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8·31 부동산 정책이 연내 조속히 입법되도록 여·야가 대승적 관점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
- 국민 여러분께서도 8.31 정책이 당초 발표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에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성공적 입법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12.7(수) 부총리가 10개 부처 정부위원, 14개 유관 기관장과 6개 분과위원장 등 20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가졌음
 - 지난 6.3일 금융허브회의에서 민·관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체제를 구축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고, 위원회 구성 후, 이번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것임
 -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시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깝게 들을 수 있도록 업계와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였고, 아울러 금융허브 관련 모든 기관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로 구성하였음
- 회의의 주요 골자는 보도자료로 기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그간의 금융허브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내년에 추진할 내용들에 관한 것이었음
 - 특히, 6개 분야별 분과위원장들이 소관 분과위의 운영계획을 직접 소개하기도 하였음
- 위원들은 금융허브정책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모든 기관들과 민간위원들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금융허브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음

-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업무추진시 금융허브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등 모든 업무를 금융허브라는 상위목표하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자는 제안이 있었음(은행연합회)

□ 회의에서 개선된 다른 주요 의견으로는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보완적 조치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 또한, 구조조정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회계·법률시장의 국제화가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 앞으로 KAMCO 등이 해외 부실채권시장에 진출시 우리나라 회계·법무법인의 동시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KAMCO)
- 한편, KIC 출범('05.7.1) 이후 약 60개의 외국 자산운용사가 KIC를 방문하는 등 국내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음

- 부총리는 앞으로 모든 유관기관이 역량을 결집해서 금융허브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 특히, 민간위원이 주축이 되는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반기별) 할 계획임

- 정부는 지난 월요일(12.5)에 대통령 주재로 「규제 개혁 추진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 서비스산업 육성 총괄부처로서 재경부는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계획>을 보고

주요 보고내용

(1) 추진 성과

-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서비스산업內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개선해왔음
 - 먼저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고
 - * 공정위 등 관계부처 T/F 논의 결과 43개 과제 개선 합의(04년)
 - 금융·법률·물류 등 지식기반서비스*, 문화·관광·레저서비스** 관련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
 - * 자산운용업 규제개선, 금융서비스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추진 등
 - **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관광지 조성 관련 절차 간소화 등
- 한편, 경제자유구역·지역특구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향후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
 -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및 외국 영리의료 법인 진입 허용 등
 - * (지역특구 내) 외국어교육특구내 외국인 교사임용과 관련 특례 적용 등

(2) 향후 계획

□ 국내 서비스 산업은 <개방과 경쟁>,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면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

○ 정부는 27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임

* 12월 8일 현재 문화, 금융, 관광·레저 등 18개 분야 대책 확정·발표

□ 다음 주에 총리 주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개최 예정 (12월 13일, 火)

○ 사회서비스 분야 (교육·의료·보육) 과제에 대해 논의 계획

* (例) 교육서비스 : 수월성 교육 강화, 대학운영 효율화 방안 등
보육서비스 : 보육료 자율화 등

□ 10대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대책 마련

○ 주요 서비스 분야(10개 분야) 개방대책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

* (10개 분야)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의료·영화상영·
뉴스제공업·통신·금융

□ 또한 재정부 차원에서도 지난달 구성된 「규제 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외환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

지역특구제도 운영 현황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하는 제도로써

* '04.3.2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공포 및 '04.9.23일 동법 시행

- '05.12월 현재 지자체로부터의 지역특구 지정 신청건은 총50건이며 이중 총41건을 특구로 지정하였고, 철회한 4건을 제외한 5건은 부처협의중임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 금년초 지자체 등의 요구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새로 25개 사항의 규제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지정 관련 절차도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중이며
 - 금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지역특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사업의 종류가 대폭 확대되며, 지정관련 절차도 간소화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특구 지정만큼 지정된 특구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 우선, 지정된 특구의 사후관리를 위해 특구별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특구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수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 이와 아울러, 특구위원회에서는 매년 보고되는 **지역특구 성과보고서**와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특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 **운영성과가 높은 특구**는 특구 우수사례 발표대회, 특산품 전시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 **부진한 특구**에 대하여는 특구계획 변경·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신규지정 지역소개

□ 정부는 12월 6(화)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 등 10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하여 지역특구는 총 41개로 증가하였음

※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지역

▲진안 홍삼·한방특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충주 사과특구, ▲옥천 옷산업특구, ▲영덕 대게특구,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김해 평생교육특구 등임

□ 각 지역의 자세한 지정사유 및 규제특례 등 주요내용은 12월 5일 기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12.13~18일간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그간 DDA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에 합의할 예정임

* 금번 회의는 당초 협상 분야별 세부원칙(modalities) 타결을 목표로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농림부장관, 관계부처로 정부대표단을 구성·참석할 예정임

※ 각료회의 기간 중 1,700여명*의 시위대가 홍콩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외교부, 농림부 합동으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화적인 시위를 당부할 예정(12.8(목), 10:30, 농림부)

* 전농 900여명, 한농연 200여명, 카톨릭 농민회 100여명, 민노총 150여명, 전여농 100여명 등

- 이번 홍콩각료회의는 주요국들의 입장 고수로 당초 목표하였던 협상분야별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될 전망
- 다만, 내년 상반기중 각료회의 개최 등에 합의할 경우 향후 협상이 급진전 될 가능성이 있음